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0월20일(월)
통권1호(제1권 제12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논평 이 논평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로서 격주로 게재합니다.

“식량부터 보내자 !”

투자 격언에 ‘기회는 소녀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기회는 부지불식간에 수줍은 듯 다가왔다가 잡지 못하면 어느새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뜻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북핵문제가 해결은 아니지만 진전된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이 중단했던 불능화조치를 재개한 것도 그렇고, 6자회담의 재개 조짐이 그렇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도 ‘북핵’이며, 당국자 간 관계를 중단시킨 계기가 됐던 김하중 장관의 발언도 ‘북핵’이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로만 본다면 공은 남쪽 코트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정말로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면 기회가 온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차라리 오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남기기 십상이다. 10여 년 전 우리에게 IMF 사태를 주셨던 분 시절을 생각해보자.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온다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1차 북핵사태는 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합의를 통해 큰 고비를 넘겼다. 고비가 큰 과정이었던 만큼 외교력만 잘 발휘했다면 우리로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물론 동북아정세의 지렛대 역할도 가능했던 기회였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핵을 든 손과는 악수할 수 없다’는 자세로 대북강경책으로만 일관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철저한 통미봉남으로 협의 과정에는 참여도 못한 채 경수로 사업 부담만 떠안은 ‘봉’ 신세가 됐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그 후과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럼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관건은 우리의 진정성을 어떻게 북한에게 보여주는가에 있다. 지금 북한은 남한 당국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진정성을 의심한다. 북한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다. 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말과는 다른

메시지와 시그널을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 자리에서는 양대 선언 이행을 말하면서, 저 자리에서는 개성공단 숙소 건립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다. 역지사지해서 우리라면 이 자리에서는 이 말하고, 저 자리에서는 딴 말을 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것인가? 형식과 명분만 생각하면 기회는 토끼처럼 달아나고, 자칫 위기가 그 자리를 이을 수도 있다.

식량을 보내면 길이 열린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식량 지원에서 기회를 살려갈 것을 제안한다.

식량 지원을 위한 당국 간 협의에 북한이 소극적이라면 적십자를 통해서든, 안 되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든 보내야 한다. 그것도 안 되면 미국이 보내기로 한 것에 추가해서 보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보내는 형식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남한 당국이 관계회복을 위해 북한과 진지하게 함께 노력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량 포대에 굳이 ‘대한민국’이라는 도장을 찍지 않아도 개성을 통해서, 단동을 통해서 그것이 남한에서 보낸 것임을 북한 주민도 다 안다. 다 알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처럼 북한 당국이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북한 주민들은 마음속으로 다들 고맙다고 느낄 것이다.

개성공단의 숙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은 이미 작년엔 세워 났으니 집행만 하면 된다. CEO 출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약속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북한도 양대 선언 이행에 대한 남한 당국의 말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대화의 길은 터진다. 그리고 길이 터져야 금강산 문제의 사과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계획대로 북핵 문제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무조건 식량부터 보내자. 그것이 수순이다.

식량이 가는 길이 대화가 오는 길이다.

▶제12호 목 차

이주의 칼럼

남북 상생·공영, 경제특구가 답이다 ----- 2

이주의 주요 기사

중 “중재 통했다” 흥분...일 “30분 전 통보” 낙담 -----	3
北, 라진항과 철도 통해 ‘국제물류허브’ 꿈꿔 -----	4
“北 올해 식량 필요량 20% 부족” -----	5
전문가들 “북 검증 합의로 미 대북정책 동력 마련”-----	6
北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중대결단 검토” 배경은? -----	7
“美, 한국에 연내 대북 비료지원 제안” -----	8
北 대변, 조선신보 “허언 아니다” -----	9
북 언론 특별징후 없어 ... ‘중대발표’ 없을 듯 -----	10
Setting a new course with North Korea -----	11
対北エネ支援、不参加を確認＝拉致進展が条件－政府対策本部 ----	11
추천논문 /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 -----	12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2008 국제학술회의

- ▶주제 :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미래
- ▶일시 : 2008년 10월 22일(수)~23(목) 09:3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20층
- ▶주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토론회

- ▶주제 : 통일한국의 국가승계 문제와 그 정책 대안
- ▶일시 : 2008년 10월 23일(목) 14: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008 광주평화회의

- ▶주제 : 동북아 평화체제와 국제 연대
- ▶기조강연 :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공동체
-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 ▶일시 : 2008년 10월 24(금) 13:00
- ▶장소 : 호남대 국제회의실

이 주의 칼럼

남북 상생·공영, 경제특구가 답이다

김영운(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일 전 개성을 다녀왔다. 개성에 와서 몇 번 본 적 있는 북측 안내원의 모습이 이번에도 보인다. 그 쪽에서 더 반가워한다. 자꾸 보니 반갑고, 반가우니 속마음도 털어 놓게 된다. 그 순간 남북이 자주 만나야만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은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특구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 우선, 경제특구는 북한 지역이지만 남한에 가까운 생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규모 집단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남측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구가 건설되면 남한과의 연결은 필수적이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자동차길, 철길이 만들어지고 통신으로도 연결된다. 물류와 인적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작은 규모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평양·남포 지역, 더 나아가 신의주나 나진·선봉 지역에 조성되면, 이 특구들은 남쪽과 연결되고, 특구와 특구가 서로 연결된다. 자연히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이 개발되고, 이것이 북한 지역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특구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의 후생 증대, 그들의 심층의 변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는 바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남북 사이에 제대로 된 경제공동체 건설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의 건설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의 많은 부분은 정부의 몫이다. 남한에도 공단이 조성되면 그 기반시설 조성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모두는 공단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바탕이 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남북 경제관계에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고 싶다.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이나 개혁·개방을 포함한 북한의 변화를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너무 강하게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너무 강하게 연결시키면 남북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익 차원에서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냉각 관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더 좋다.

그래도 정부가 국민들의 대북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만큼은 반드시 지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권하고 싶다. 경제특구 건설은 그것이 갖는 경제적 이익 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경협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북한 지역에 소규모라도 여러 군데 경제특구를 만들어 남한과 연결시키는 방식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08031006>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중 “중재 통했다” 흥분...일 “30분 전 통보” 낙담

-- 10월 13일 중앙일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미국내 보수파는 강력 반발했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은 핵시설에 대한 충분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어나 로스 레티넨(공화·플로리다) 의원도 11일 “부시 행정부는 중요한 대북 레버리지를 포기했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기도 전에 미국이 대가를 지불해 북한 같은 극단적인 정권이 불법 핵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부추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11일 “막다른 골목에서 협상의 불씨를 살려낸 조치이며 퇴임을 100일 남긴 부시의 주요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북한 내 의심 시설 검증’이란 민감한 문제에선 한발 물러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투명해졌다는 비난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12일 미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종료까지 100일을 남긴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차분하게 대응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외신을 인용해 논평 없이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은 내심 흥분하는 분위기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11일 “북·미 간 갈등 해소로 중국 부담이 줄어든 데다 중국의 물밑 중재가 인정받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 내에선 “북한도 미국의 용단에 상응하는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하는 분위기가 많다.

반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대북 제재 해제 조건으로 내걸어온 일본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낙담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이번 조치 발표 30분 전에 야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에게 전화 통보한 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소 총리는 12일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북핵)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단행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하나의 방법”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납치 문제는 앞으로 교섭 과정에서 얘기가 가능하다. 대북 수단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달 말께 북에 철강재 제공할듯

-- 10월 13일 연합뉴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철강재 3천t을 배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배송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

지만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12일)에 즈음해 불능화 작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철강재는 생산이 완료되는대로 배송할 가능성이 높다고 13일 복수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정부가 보낼 철강재는 이달 중·하순께 생산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 대가로 제공해온 중유 및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중 일부인 자동용접강관 3천t을 9~10월 중 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지난 달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지연에 반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철강재의 생산이 완료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한전, 개성공단 전력 공급 손실액 140억원

-- 10월 13일 문화일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돼 대북 협력사업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뜨거운 감자’격인 한국전력의 전력 손실액이 1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기현(한나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액은 4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력공급 첫 해인 2005년 29억4000만원, 2006년 28억9000만원의 손실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애초 매년 30억원선일 것이란 예측을 빗나간 것이다.

아울러 올들어 9월까지 손실 추정액은 42억원으로 나타나 4년간 누계손실액은 140억7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같은 기간 전력 판매량은 2005년 7131MWh, 2006년 2만8157MWh, 2007년 4만5573MWh, 올해는 5만733MWh를 기록했다. 개성공단 전력은 2005년초 “국내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점을 감안해 남한에 있는 중소기업전용공단으로 간주, 일반용보다 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급원가인 kWh당 70원보다 싼 60원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사업 어떻게 재조정될까

-- 10월 13일 연합뉴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핵시설 불능화 재개 등 북핵 프로세스가 진전되면서 그간 보류돼온 정부의 대북사업들이 어떻게 재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전날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한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의 언급은 핵문제 진전에 맞춰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바탕한 것이다.

중대 장애물이던 북핵 검증 문제가 옆으로 치워지고 비핵화 2단계(신고·불능화)가 마무리를 향해 가게 된 현 상황을 ‘진전’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춰 대북 사업들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 남북간 출입 원활화를 위한 통신 자재·장비 제공, 개성공단 인프라 조성 등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에 막혀있던 사업들이 일단 검토 대상에 오를 공산이 커 보인다.

북핵 상황 진전이 모든 고려 요인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이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정부 안팎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北, 20년간 기아지수 악화 세계 2위”<세계식량정책연구소>

-- 10월 14일 연합뉴스

북한이 1990년부터 2008년 사이 기아지수가 악화된 순서로 콩고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세계식량정책연구소(IFPRI)의 ‘2008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대 기아지수(GHI) 악화국가운데 나머지는 모두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차지함으로써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선 북한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GHI는 총 인구대비 영양부족률, 5살 미만 아동의 저체중률, 사망률을 종합한 수치로, 2008보고서에서 북한은 18.8을 기록해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됐다.

IFPRI는 기아지수가 10이상이면 ‘심각(serious)’, 20 이상이면 ‘불안(alarming)’, 30 이상이면 ‘극히 불안(extremely alarming)’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하위군인 ‘극히 불안’국엔 콩고, 에리트레아, 부룬디, 니제르, 시에라리온 등 내전이나 분쟁을 경험한 아프리카 최빈국들이 포함돼 북한은 이들 나라보다는 나은 사정이다.

“기본합의서 실천 - 10·4 선언 이행 ... 정부, 북한과 패키지 협상 나서야”

-- 10월 14일 중앙일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해제로) 내부적으로 여러 (대북) 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 대북 통신·자재 장비 제공 등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류했던 대북 철강재 3000t 제공도 이달 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가 바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북한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관계를 단아버리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고 말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도 변수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민감한 시점인 만큼 내부 결속 차원에서 대남관계에선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담화에서 “6·15 선언, 10·4 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직접 밝힌 것도 10·4 선언 이행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타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에서 김 위원장의 담화는 수정 불가능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려면 정부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4 선언의 이행 문제는 남북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정부도 얻는 게 있는 ‘윈-윈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北, 라진항과 철도 통해 ‘국제물류허브’ 꿈꿔

-- 10월 15일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라진항 개건과 라진-하산 철도연결 사업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이어지는 국제적 물동량을 처리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다. 이 꿈에는 남한의 한국철도공사와 물류회사도 참여하게 된다.

일단 북한과 러시아는 라진-하산 철도 개건과 라진항 개선을 위한 합영회사에 지난 10일까지 1억4천만유로의 출자를 완료했다. TSR로 이어지는 철로 연결을 위해 북·러 양측은 라진-하산간 철로를 중량급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철로를 보강하고, 노선폭이 다른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바퀴의 교체 없이도 열차가 오갈 수 있는 ‘혼합선’ 철로로 만들 계획이다.

혼합선 철로는 궤폭이 좁은 북한쪽 철로에 바깥쪽으로 한줄을 더 깔아 광폭 열차도 다닐 수 있게 한 것.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의 말을 인용해 라진-하산 철도는 2011년 3만5천개, 2012년 7만개, 2013년 10만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진항의 관리·운영 책임자인 배호철 항장은 3단계로 나뉘어 개건되는 라진항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10월말이면 20만개의 컨테이너를, 2단계 공사가 끝나면 4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북러 양측은 항구의 바닥 준설을 통해 대형 선박의 정박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북한은 라진-하산간 철도의 TSR과 연결을 염두에 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먼저 남측에 동해선 남북 연결철도를 통한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연결을 제안하는 등 동해지역을 통해 연결된 남북 철도를 TSR과 연결하는 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북·러간 라진항 및 라진-하산 철도 개건 사업에는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국내 물류회사도 컨소시엄으로 참여, 러시아의 지분 중 40%를 투자키로 했으나, 러시아측과 라진항 운영 참여 문제 등으로 세부 미결사안이 남아 있어 아직 출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北 올해 식량 필요량 20% 부족”

-- 10월 15일 연합뉴스

북한에서 올해 필요한 식량의 20% 정도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2008년 북한의 식량 수급량 평가결과 수용량 540만t중 2008년 9월 현재 441만t이 확보돼 99만t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현재 확보한 441만t은 전체 필요량의 81%에 해당하는 양이어서 전체 필요량의 19% 정도가 모자라는 셈이 된다. 북한이 올해 확보한 식량은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양이 401만이며 올해 각국으로부터 도입된 40만을 포함한 것이다.

올해 도입된 식량 40만은 중국으로부터 전달받은 23만을 비롯해 미국(11.8만), 세계식량계획(WFP, 4.2만), 러시아(0.3만), 기타(1.5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이 올해 공급한 식량은 해관 통관 기준으로 대북 금수조치로 올해 4~5월에는 식량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6~7월 두 달 동안 옥수수 5만이 공급되는 등 이후에 재개됐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안하며 대북 식량지원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올해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된 식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NYT “대북협상 굴복 아니다” ... 美 강경파 비판

-- 10월 15일 연합뉴스

북한이 핵 불능화를 재개하고,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최근의 북·미 협상과 관련,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사설을 통해 “(미국내) 대북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굴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 협상에 사용된 단어들도 모호하고 기밀한 것이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 최악의 충돌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NYT는 “최근 몇 주 동안 양측은 위험한 치킨 게임(한치의 양보 없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미국은 사찰단이 어떤 장소든 접근해서 어떤 것도 볼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해 온 데 대해 북측은 영변 핵시설 접근을 차단하고 플루토늄 생산 재개로 위협했으며, 두번째 핵실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핵 검증과 관련, 북한은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및 다른 연구시설, 양측이 동의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면서 핵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고, 이로 인해 부시 대통령은 최소한 자신의 임기동안 북한 정권이 더 이상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번 협상이 ‘굴복’이라고 주장하는 미국내 대북 강경파들에게 “지난 6년동안 딕 체니와 다른 강경파들은 북한과의 어떤 심각한 대화도 꺼려 왔으며, 그 동안 북한 과학자들은 최소한 4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면서 “그들의 전략은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관광 300여일 만에 10만명 돌파

-- 10월 15일 머니투데이

현대아산은 15일 개성관광객이 누적인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관광이 시작된 후 10개월 10일만이다.

현대아산은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70명, 월 평균 1만명이 개성관광을 다녀왔으며 외국인도 약 2600여명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는 월간 최다인 1만 2168명을 기록했다. 현대아산은 10만명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이날 오전 개성관광 출발지인 도라산남북출입사무소에서 관광객 200여명과 현대아산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아산은 10만번째 관광객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 관광객 모두에게 축하떡을 돌렸다. 개성에서는 북측 직원이 10만번째 관광객에게 직접 꽃다발을 걸어주고 함께 기념촬영도 가진다.

현대아산은 개성관광의 인기비결로 박연폭포, 선죽교, 고려박물관 등을 하루 만에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지난 4월 시작된 오후관광도 개성공단 행사와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 입주사 및 투자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놀랜드 한반도 전문가, “개성공단 사업 바람직”

-- 10월 15일 아시아경제

한반도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14일 개성공업지구를 방문, “개성공단사업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커스 놀랜드 연구원 일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개성공단에 도착해 문무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환담한 뒤 개성공단 사업 현황 설명을 들었다.

그는 입주기업 공장을 둘러본 뒤 “개성공단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공장 근로 환경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 감탄 했다.

놀랜드 연구원 일행은 이어 그린닥터스협력병원, 현대아산개성사업소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신원예벤에셀, 부천공업 등 입주기업 공장 두 곳을 방문한 뒤 오후 3시30분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北 핵검증 협력, 테러지원국 해제 실효성에 달려”<조선신보>

-- 10월 15일 연합뉴스

핵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력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10.3합의 이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북한은 “5자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의무 이행을 태만하거나 거부하는 데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보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조선이 주시하는 5자의 의무 이행’ 제목의 기사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르는 비핵화 과정은 검증과 감시를 전제로 한다”며 “조선의 핵포기 과정과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5자의 의무 이행도 검증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문에 “금후 실질적인 검증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가 어떤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신문은 말하고 “공은 미국을 비롯한 5자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문은 중유 100만에 상당하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이 절반만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고 특히 일본을 지목, “조미(북미)가 핵신고서 검증에 대해 합의한 다음에도 납치문제를 구실삼아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검증·감시체계 수립 합의 이후 “비핵화 과정은 지금까지보다 더 복잡성을 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선(북한)의 외교정책에도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하게 완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동시행동의 원칙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 “북 검증 합의로 미 대북정책 동력 마련”

-- 10월 16일 연합뉴스

북 핵 검증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 간 최근 합의로 내

년 초에 들어설 차기 미국 행정부가 6자 회담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워싱턴 소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로버트 아인혼 상임고문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번 합의로 내년 1월에 들어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을 계속 추진할 동력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고문은 “6자회담 상황이 다음 달에 심각하게 악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면서 “최소한 이번 합의를 통해 6자회담 과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윌리엄 앤 메어리 대학 부학장은 “검증과 관련한 미·북 간 양해는 아직 구두로만 이뤄진 것이며, 이를 해석하는 데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6자회담을 다시 진행 중인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대·불안 교차하는 개성공단

-- 10월 16일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가 최근 들어 남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이다.

협의회는 북측이 개성공단 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 선전물 살포 중단을 요구하자 지난 10일 단체들을 향해 우려를 표하는 자료를 냈고, 13일에는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입주기업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관계의 단절 속에 인력공급난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답보 등에 한숨을 내 쉬면서도 그간 목소리 내길 주저해 왔지만 최근에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적극 표명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그 만큼 주변 안보 정세의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기업들은 자료에서 표명했듯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오랜만에 들려온 ‘희소식’으로 보고 있다. 당장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대북 설비 반출 제한 완화 등으로 인해 공단 발전의 장애물들이 일부 견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호재 속에서도 기업인들은 여전히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인력난 해소에 필요한 근로자 숙소 건설과 ‘3통 해결’ 등 산재한 현안을 풀려면 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난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양측이 자기 주장만 펴고 헤어진데서 보듯 실질적인 대화 재개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FAO “북한, 식량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

-- 10월 16일 노컷뉴스

북한의 식량 공급 전망은 9월 중순 현재,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다. 식량농업기구의 앙리 조세랑 세계정보, 조기경보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북한은 식량을 수입할 능력이 매우 낮은 ‘저소득 식량 부족국’인데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만큼, 외부의 추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식량농업기구는 “9월 중순 현재, 북한은 67만 4천 900톤의 무상 식량을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전달받았고, 12만 2천 톤의 곡물을 대금을 주고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6만 8천 600톤의 무상 식량 지원을 받았으며 4만 1천200 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돼 대금을 주고 수입한 곡물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올해 비료 부족을 겪고, 홍수 피해가 없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현지에서 진행 중인 농작물 수확량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국제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강경태도에 금강산 이어 개성관광도 중단 ‘우려’

-- 10월 16일 연합뉴스

북한이 16일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관광마저 멈춰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아산은 지난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여파로 개성관광객도 평소 400-500여명에서 200-300여명으로 줄어든 자 이번 10만명 행사를 계기로 재도약을 바랐지만 북측의 강경 태도 표명에 따라 당분간 현 상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측이 강경 조치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 관광마저 중단시킬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면서 현대아산으로서는 대북관광이 양측을 모두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 있다.

北 “남북관계 전면차단 등 중대결단 검토” 배경은?

-- 10월 16일 노컷뉴스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반북 대결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

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포함해 각종 대남 강경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빠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공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 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동신문의 이번 논평원의 글은 지난 4월 1일 논평원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공세를 본격화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지난 7월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 당국간 전면적 대화 재개 제의를 내놓았으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남북관계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냉랭한 분위기를 지속해왔다.

북한의 이번 입장 발표는 우리 정부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며 이 문제가 풀려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논평원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이 본격 제기된 이후 남쪽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작전계획 5029”, 각종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그 누가 우리에게 도발을 걸어온다면 대결에는 대결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원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빠라’ 살포가 계속되면서 북한 내부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데 따른 것으로도 분석된다.

남북 역사학자들, 고려왕궁터 발굴재개 협의

-- 10월 16일 연합뉴스

남북한의 역사학자들이 오는 23일 개성에서 만나 고려왕궁터인 ‘만월대(滿月臺)’ 발굴 작업의 재개문제를 협의한다.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16일 “지난해 봄, 가을 두 차례 고려왕궁터인 개성 만월대 서부 건축군 발굴 후 올해 처음으로 실무협의를 열린다”

며 “애초 지난 4월 발굴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 사업이 미뤄졌다가 최근 재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에 북측에선 중앙역사박물관, 민족화해협의회 의 실무진이 나오며 남측은 땅이 열면 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 11월 초 발굴을 재개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남측 역사학자 10명, 북측 40명으로 구성된 공동 발굴단은 지난해 5~6월 만월대 서부 건축군 가운데 1만평에 대한 시굴을 거쳐 같은 해 9~11월 1천평을 본격 발굴한 결과 11동의 건축물 기초와 회랑, 배수구 등을 찾아냈다.

고려청자와 청자기와, 명문기와 등 고려시대 왕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대거 출토됐다. 발굴에 참여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들 유적과 유물 약 2천점을 소개한 책자를 최근 냈고, 북측도 지난 8월말부터 평양 중앙역사박물관에서 출토 유물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인디에프 “개성공장 생산 전진기지로”

-- 10월 16일 연합뉴스

패션업체 ㈜인디에프(1,720원 65 -3.6%)가 개성에 자체 생산 공장을 가동하며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기명 인디에프 사장은 지난 15일 개성 인디에프 공장의 착공식에서 “2010년까지 안정화시켜 숙녀복 생산량의 35%를 개성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디에프 개성공장은 공장 2층과 사무동 4층, 경비동 1층을 합쳐 연면적 3840평 규모로 개성 내 국내 의류업체의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다.

김 사장은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하면 국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약 30%의 원가가 절감되는데 개성에서는 무려 45%가 절감된다”며 “개성공장을 통해 연간 6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보다 북한의 인건비가 낮은데 직원들의 이직이 어려워 노동 숙련도가 그대로 회사 자산으로 쌓인다는 것. 물류 기간이 중국보다 1주일가량 단축되는 것도 경쟁력으로 꼽았다.

제주 흑돼지·양돈기술 북한 간다

-- 10월 16일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제주도가 북측과 흑돼지의 양돈기술 이전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고성군도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송중용 제주도 축정과장 등 관계자 8명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초청으로 15일 북한에 가 18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 방북단은 민화협의 요청으로 9월 말 북한 개성에서 접착을 가져 ‘흑돼지 협력사업’에 대해 1차 협의했

으며, 이번에는 흑돼지를 사육할 북한 내 양돈장의 입지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도민운동본부는 흑돼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북한에 300마리 정도의 흑돼지를 보내 청정 양돈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DJ “李대통령, 남북관계 ‘5대 결단’ 해야”

-- 10월 17일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일 “지금 정부는 남북대화를 열지 못해 국제적 흐름에서 소외된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공동선언 인정 및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5대 결단을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 센터’ 창립식에 참석,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자리에서 “남북대화가 시급히 재개되지 않으면 (한국이) 고립과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대 결단으로는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선언 인정 ▲인도적 쌀 지원의 조속한 재개 ▲개성공단 노동자 숙소 예정대로 건설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이 제시됐다.

그는 “6.15,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고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상회담만이 새로운 신뢰 속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 구현을 위한 성공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 한국에 연내 대북 비료지원 제안”

-- 10월 17일 서울신문

미국이 한국 정부측에 연내 대북 비료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6일 “미국측이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대북 정책 협의에서 한국측이 조속한 시기에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의했다”며 “미국측은 최근 열린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담 전후로도 대북 정책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우리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지난 5월 북한에 옥수수·밀가루 등을 중심으로 한 식량 50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 매월 5만t 안팎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비료는 미국내 법에 의해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우리측에 당장의 식량 지원보다는 내년에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식량난을 막기 위해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올해 북한에 쌀 50만t, 비료 40만t을 지원키로 하고 남북협력기금 3485억원을 책정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금 책정과는 별개로 실제 대북 지원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한·미 간 정책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우리측에 대북 비료 지원을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대북 정책도 유화적으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가 읽혀진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연내 대북 지원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캐나다, WFP 대북 긴급지원 참여

-- 10월 17일 연합뉴스

호주와 캐나다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새로 시작한 대북 긴급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각각 300만 달러와 200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캐나다 정부도 지난 10일 WFP를 통해 북한에 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WFP의 요청에 따라 16일 현재까지 대북 지원금을 기부한 나라는 스위스 271만2천달러, 이탈리아 77만8천달러, 노르웨이가 39만5천달러, 뉴질랜드 34만7천달러, 룩셈부르크 29만8천달러이며, 호주와 캐나다의 지원 약속으로 참여국이 7개로 늘어났다.

WFP는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선 최대 공여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최대 6천만달러 상당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19일까지 진행될 착랑 조사 결과가 나오는 11월초 지원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이 동결 중인 북한자산 3,200만 달러”

-- 10월 17일 노컷뉴스

미국은 지난해 말 현재 북한 정부와 단체, 그리고 북한 주민 소유의 미국 내 거의 모든 자산 총 3천2백만 달러의 북한 자산을 동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테러 관련 국가와 조직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3천2백만 달러에 이르는 북한과 관련한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도 함께 공개하고 북한 자산은 지난 2000년 6월 이후 거의 모두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2007년 12월31일 현재 미국이 동결 중인 미국내 북한 자산 3천2백만 달러는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10만 달러가 늘었다.

이들 동결 자산은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이 중 3천1백

80만 달러는 미국 내에, 그리고 20만 달러는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12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지만 앞서 지난 6월2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당시 함께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13466호에 따라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한 동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 리비아에 건설 노동자 재파견”

-- 10월 17일 노컷뉴스

북한은 수년 전 리비아에서 철수시켰던 건설 노동자들을 다시 파견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북아프리카의 석유 부국 리비아에 대규모 건설 노동자들을 다시 파견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 정부간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리비아는 지난 2006년 인력 진출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한 상태이지만, 지난 2003년 리비아가 핵 포기를 선언하고 서방과 외교를 강화하자, 북한은 2004년부터 리비아 내 북한 인력을 대부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2008년 현재 리비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숫자는 수십 명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북한은 몽골과도 앞으로 5년 동안 최대 5300명의 북한 노동자를 몽골에 파견하기로 합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獬, 평양서 평화·관용 상징 ‘버디베어’ 전시회

-- 10월 17일 연합뉴스

북한 주재 독일대사관이 독일 통일 18주년과 북한 정권수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14일부터 평양 모란봉 공원에서 베를린의 상징인 ‘버디 베어(Buddy bear)’상 18개를 전시하고 있다.

주한 독일대사관측은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이 전시회는 토마스 셰퍼 북한 주재 독일 대사에 의해 마련됐으며 “버디 베어는 평화와 관용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베를린의 마스코트인 ‘버디 베어’는 만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곰 캐릭터로 각국의 문화와 상징을 표현하고 있다. 버디 베어는 지난 2005년 10~11월 서울에서도 전시회가 열렸었다.

北 대변, 조선신보 “허언 아니다”

-- 10월 17일 연합뉴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6일 북한 노동신문이 말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면서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란

다면 대통령으로서 정책시정의 의지를 ‘대화일방(북한)’에게 정확히 전달할 방도를 찾고 국면타개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동족 대결 정권에 주어진 마지막 양자택일’ 제목의 글에서 “논평원의 글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선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주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말하고 “여하튼 정세의 전환 국면에서 발표된 논평의 강도높은 비난 논조를 감안한다면 이명박 정권에 주어진 선택을 위한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논평원 글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신문은 “북남관계의 현황을 당국 대화나 경제협력의 중단과 같은 현상만을 두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9월 이후 남조선의 극우 보수세력들은 조선의 최고영도자(김정일)가 국경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 유언비어를 내돌려 악랄한 반복 선전을 일삼았다”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본격 제기된 후 남한 민.관의 대북 언행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미국, 4차 대북 식량원조 선적 예정

-- 10월 17일 연합뉴스

미국이 대북 4차 식량 지원 물자를 선적할 예정이라고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머시 코어와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크리스천 프렌즈 오브 코리아 등 미국의 5개 구호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만5천60t 규모의 옥수수과 콩이 급중 중선적돼 내달 하순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보내는 식량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공공 배급소와 고아원, 학교, 병원, 탁아소를 통해 어린이와 임신부, 수유부,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89만4천명에게 배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식량 지원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자금을 제공하고 구호단체들이 배급을 맡는 형식이다. 미국의 대북 식량 원조는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의 5개 구호단체들은 1년간 총 10만t의 식량을 북한의 취약계층에 제공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도 미국의 기여금으로 구입한 40만t의 식량을 보낼 계획이다.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4주년 기념식

-- 10월 17일 연합뉴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창립 4주년 기념식이 17일 개성공단 현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문무홍 위원장과 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대아산,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과 입주기업인 코튼클럽, 성화개성, 부천공업 등에 대한 통일부 장관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2004년 10월20일 출범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력해 개성공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단 관련 인·허가와 운영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강 김포시장, 김포~개성 육상교통망 청와대 건의

-- 10월 20일 뉴시스

경기 김포시는 강경구 김포시장이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김포와 개성을 잇는 육상교통망 확충사업 추진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시장은 16일 청와대와 통일부를 방문, 김포와 개성을 연결하는 육상교통망 확충이 장래 남북협력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강 시장의 사업계획을 경청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로 경제성 등이 뛰어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가 8월28일 개최한 중간보고회에서 남북 간의 대량 여객, 화물 수송에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교통망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지리적 여건과 경제성이 우수한 김포시를 교통망의 거점으로 삼고 남북교류 산업벨트가 형성 될 수 있는 가능한 노선별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북 언론 특별징후 없어 ... ‘중대발표’ 없을 듯

-- 10월 20일 노컷뉴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또는 남북관계 등과 관련, 곧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 북한 방송 편성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 오늘(20일) 중 '중대발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북·대남방송 전문 수신·연구 단체인 '동북아방송연구회'는 “19일과 20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 편성상 이상 징후가 없고 통상적인 방송 편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회는 “북한 방송들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발표 등 중대발표 당시 방송순서에서 해당 발표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않고 누락한 예가 있다”며 “하지만 19~20일 양일간 북한 방송들의 방송순서 분석 결과, 특별한 공백이 없고 평소와 같은 패턴의 편성을 하고 있어

오늘 중 이른바 ‘평양발 중대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산케이 신문은 북한이 외교공관에 금주령을 내리고 곧 모종의 ‘중대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Back from the brink

(지난 6월의) 시점으로 회귀

-- 10월 14일 Chicago Tribune

출처:<http://www.chicagotribune.com/news/opinion/chi-1014edit2oct14,0,1371618.story>

Last June, President Bush said he was preparing to remove North Korea from the U.S. State Department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 But then . . . it didn't happen. The sticking point: The administration wanted Pyongyang to allow extensive inspections so American leaders could be sure the North was telling the truth about how much nuclear weapon material it had produced.

The North went ballistic, accusing the U.S. of reneging on the deal. Pyongyang kicked everything in reverse. It closed its nuclear facilities to inspectors and started to rebuild. And it began to make serious preparations that could have ended with more nukes in its arsenal.

On Saturday, this game of diplomatic chicken—with unimaginably high stakes—ended, at least for the time being. The U.S. removed North Korea from the terrorism list, arguing that it had worked out the best deal possible.

The benefits of this deal were immediately apparent: The North, which had closed its nuclear facilities to UN inspectors, is allowing them again. Pyongyang announced that it would resume disabling its atomic program.

지난 6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못하였음. 난점은 미행정부 가 북한 핵무기의 생산량에 대해 확신을 하기 위해 확장된 감찰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북한은 미행정부를 비난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고 핵무기의 재산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음. 마침내 지난 토요일(11일)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핵 해체의 과정을 재개하였음. 많은 회의와 우려 그리고 예상되는 향후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Setting a new course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

-- 10월 19일 Washington Times

출처:<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08/oct/19/setting-a-new-course-with-north-korea/>

North Korean agreement to resume disabling its plutonium program and allow verification of its plutonium production in

return for being delis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s welcome news.

Yet the deal once again prompts a troubling question: How can Washington avoid reacting under pressure from Pyongyang, especially when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ould take years to complete? Moreover, now that Kim Jong-il's health is at issue, why take chances that his successor might be less able to keep a nuclear deal or control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aterial?

The answer to both questions is for Washington to put a bigger deal on the negotiating table now.

Instead of the incremental approach taken so far, the new U.S. president needs to propose a comprehensive menu of sequenced actions toward a fundamentally new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 political, economic and strategic. In return, Pyongyang needs to agree to satisfy international norms of behavior, starting with steps to stop exporting nuclear technology and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t also needs to welcome full people-to-people relations signifying its willingness to join the rest of the world.

.....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북핵 해체와 검증을 수 용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뉴스임. 그러나 아직 이 협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 행정부는 북한과 정치, 경제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연속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임.

対北エネ支援、不参加を確認＝拉致進展が条件－政府対策本部

대북에너지지원, 불참가 확인=납치 진전이 조건-정부대책본부

-- 10월 15일 시사통신

政府は15日夕、首相官邸で拉致問題対策本部（本部長・麻生太郎首相）の会合を開いた。米国が北朝鮮のテロ支援国指定を解除したことを受け、首相と全閣僚が出席して今後の政府の対応を協議。拉致問題を含む日朝関係の進展がない限り、北朝鮮へのエネルギー支援に参加しないことなどを申し合わせた。

冒頭あいさつした首相は「拉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国交正常化はあり得ない。待っているのは北朝鮮の行動だ。早急な被害者の帰国を強く求める」と強調した。

일본 정부는 15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납치문제대책본부(본부장·麻生太郎首相) 회합을 가졌다.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지정을 해제한 것을 두고, 수상과 전 각료가 출석해 향후 정부의 대응을 협의. 납치문제를 포함한 조일관계의 진전이 없는 한, 북한에의 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을 것 등을 확인했다. 수상은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북한의 행동을 기다리며, 조속한 피해자의 귀국을 강하게 열망한다」고 강조.

추천 논문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

박번순(연구전문위원, SERI), Kao Jen-Shan(대만경제연구원 제3연구소 부소장) 외 5인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와 『대만경제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물이다.

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 이후 공업화를 통해 고도성장했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편입한 이후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미국 등 전통적인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재 양국의 대중국 투자가 양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대중국 투자가 양국의 대중국 무역구조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대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사한 목적과 방식으로 중국에 투자했던 한국과 대만이 이제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의 근본 목적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 상황에서는 너무 앞선 이야기일 수 있다. 또한 시장 규모, 자원 보유량, 국제적 위상 등등 여러 면에서 북한과 중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도 무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남북경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중국 진출 초기의 과정과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북 진출의 그것과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국 진출의 과정과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북경협을 어떻게

해야 상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초기 중국 진출은 현재의 대북 진출처럼 대부분 저렴한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생산품은 현지 내수보다 주로 외국시장에 수출되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점차 단순 임가공 수준에서 현지 자회사들은 부품 및 중간재를 조달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남북경협이 활성화된다면 남북도 이러한 수직적 산업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의 경우, 이 과정을 통해 자본, 자원, 기술, 시장 등 산업의 모든 기반이 강화되면서 수직적 산업구조를 넘어 자기 완결적, 즉 원료에서 완제품 생산과 소비, 수출까지를 총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공장 혹은 시장이 아니라 경쟁상대국이 되었다는 뜻이다.

남북경협의 결과로 북한과도 이러한 관계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중국 투자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한국은 물론 대만도 대 중국 투자에서 중국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경제공동체 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경협은 남과 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행간의 교훈은 이것이 아닐까 한다.

(이 글의 원문은 <http://www.seri.org/bk/bkSeriBookV.htm?pubkey=563&menucd=0301&gubun=1&nPage=1&submenu=>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北 대표, 유엔총회에서 국제 테러제거 조치 토의시 연설’ 보도

○ 10.16. 평양방송은 “우리나라(北)대표가 유엔총회 회의에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러행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 확대되면서 인간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 국제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더욱이 반테러전의 명목 밑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주권침해와 극도의 인권유린 행위들이 정당화되고 있는데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송은 “그는 첫째로 국가테러행위를 시급히 근절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둘째로 테러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유엔성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